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남진규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산업 전문위원

문화콘텐츠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다 보니 국가별 지자체별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이는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콘텐츠 기업들의 관심사라 생각한다. 이렇듯 모든 기업들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에 목매는 것이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의 어려운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 등 세계 선진국가에서도 콘텐츠산업의 지원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정책개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역시 오랜 지원 정책 속에 속속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지원 기간과 지원금 투자 대비 큰

지역 콘텐츠진흥원과 그 역할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는 콘텐츠라는 것이 성패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산업이기에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분야라는 특성이 주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된 요인 외에도 확립화된 지원정책과 지원금의 문제, 기업들의 지원금은 공짜 돈이라는 단일한 인식 등의 문제도 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문제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반에 걸쳐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랜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해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중국 관련 부처에 한국의 콘텐츠 분야 지원정책 노하우를 역으로 수출할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알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분야별, 사업별, 영역별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맞는 지원 정책까지 포함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때문에 각 지역별로 특화된 콘텐츠산업을 담당

하는 진흥원이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지역 진흥원의 너무 획일화되고 경직된 운영에 우려와 문제를 제시하는 지역의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비단 각 지역 진흥원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들도 많이 있다.

지역의 진흥원도 공공기관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지자체와 의회 등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이리다 보니 경직되고 획일화된 운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관리와 감독 기능은 어쩌면 당연하고 필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문제는 정책 지원 서비스의 주체인 기업들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지역기업이 우선되어야 지역기업에 맞는 정책의 실효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자명할 것인데 정답이 없는 콘텐츠산업 지원에 정답을 요구하고, 이 요구에 부합되는 정책만을 수립하는 현상이 과연 진흥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자면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정책 우수성을 언급하였지만 이 정책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를 때 우수한 정책이고 각 지역으로

보았을 때는 맞지 않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의 진흥원들의 정책을 보자면 대부분 국가적 정책을 그대로 지역에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정책이 정책 지침서가 되어 각 지역 진흥원의 예산에 맞게 프로그래밍하고 지역 지자체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국가지원금과 지역지원금 간에 중복 지원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많지 않은 지역진흥원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내년의 지원정책을 올해 설계하여 지원정책에 기업이 맞추는 것보다 올해의 예산을 각 진흥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하여 적재적소, 기업이 필요한 항목에 지원을 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레야 지원금의 소중함을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성공 사례 확보와 안정적 지원 자금 운영에만 집착하여 회사의 규모와 업력에 지원 유무가 결정되는 현실을 넘어서서 누구나 균등하게 지원을 받아 성공의 발판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 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여전한 ‘갑질’에 고달픈 아르바이트생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제때에 주지 않는 등 업주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도 끝난 터에 곧 겨울방학이 되면 청소년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0~11월 청소년 근로 사업장 56곳을 정기 감독한 결과 70%에 이르는 39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한다. 금품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주휴 수당 미지급이 22건, 임금 체납 5건, 최저임금 통보 위반 4건, 최저임금 미준수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30곳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모두 2000여 만 원이나 됐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이 많은 것은 사업주의 그릇된 생각이 많은 탓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약점을 노려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근

로조건을 무시하는 악덕 업주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방학을 맞으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교육청과 일반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 권익 특강을 이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두들 내 자식이요 내 형제’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들에 대한 ‘갑질’도 자취를 감출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들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의 눈길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노동청은 신속 인원을 더 늘려서 관련 업소에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위반과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한다. 청소년들 또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법을 충분히 파악한 뒤 부당한 처사가 있을 경우 감독기관에 알린으로써 스스로 권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하필이면 학생들 ‘문화 체험 예산’ 삭감인가

올해는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지향하는 광주로서는 아주 뜻깊은 해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25일 역사적인 공식 개관을 했기 때문이다. 옛 전남도청에 들어선 문화전당은 국제사업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이다. 현재 광주시는 공식 개관을 계기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을 늘리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시교육청은 문화수도를 꿈꾸는 지역사회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하다. 초등 3·5학년, 중등 2학년생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 체험 사업 예산을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의회 김옥자(광산 3) 의원은 내년도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문화예술 소양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비를 줄이고 있다”며 “이는 광주가 문화수도로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초등학생과 중학생 한 명당 각각 7000원과 1만 원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는 초등 5학년, 내년엔 초등 3학년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체험비만 지원할 뿐 교통비 지원은 빠져 있어 이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각급 학교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는 부실한 문화예술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예술교육 예산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삭감한다는 것은 아무리 시교육청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야말로 문화 광주의 위상이 맞는 모습 아니겠는가.

문화 마인드는 하루아침에 딱딱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 교육청은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번 예산 삭감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소장 내시경이 필요한 이유



박재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센터장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지난해 귀국한 사업가 최정호(68)씨. 최근 잦은 복통과 구도에 고통받고 있다. 체중은 지난 여름에 비해 5kg 이상이 빠졌다. 위장병으로 의심해 동네 병원을 찾아 위 내시경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등에서 목 뒤까지 뻗었던 증세가 최근에 나타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이명현상도 예전에는 없던 증세다. 최 씨는 “나이 때문인지 환경이 변한 탓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며 “병원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에 이르는 길고 구불구불한 기관으로 펼쳤을 때 길이가 평균 6m에 달한다. 입, 항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일반 내시경으로는 접근하기가 무척 어렵다. 문제를 찾아내기 어려운 이유다. 소장암에는 출혈, 장천공, 식욕부진을 동반한 체중감소 등이 동반된다. 하지만,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퍼진 뒤이며, 소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특별한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장질환의 원인에는 크게 가족력이나 환경적 원인을 들 수 있다. 우선 가족력에 소장 관련 질환이 있다면, 소장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가족 중 용종증, 크론병, 쉐리악병, 포이츠-에거스증후군,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신경섬유종증,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등이 나타난 바 있다면 소장질환에 대비해야 한다. 외적 요인은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이다. 육류 및 소금에 절인 훈제 음식 등 포화지방 함유율이 높은 음식을 주로 섭취할 때 발생 비율도 높아진다. 서구권이 소장암 발생 비율이 높은 것도 생활습관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날로 서구권과 유사한 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인의 생활습관 변화다.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비만’에 따르면 성인 국민 2명 중 1명은 비만 또는 과체중이고, 5명 중 1명은 복부비만이다.

한국인의 식생활이 서구권과 비슷해지면서 비만과 대사성 질환 등 서구형 질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소장암은 소화기 암의 2% 내로 발생비율은 낮지만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방과 검사가 필요하다.

소장질환은 대부분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데, 감각이 퇴화된 성인의 신경은 소장에 발생한 문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뒷목의 뻣뻣함, 등 통증, 이명 등을 호소하는데 원인은 후복강으로 궤양이 침범했기 때문일 수 있다.

유암종이 발생했을 때는 신경 내 분비 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 얼굴과 가슴에 홍조가 생기거나 설사, 가려진 전신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내 출혈이 시작되면 빈혈이 뒤따를 수 있다. 소장의 문제

를 예측하지 못한면 원인불명의 빈혈이 되기 십상이다. 이처럼 막상 증세가 나타나도 일반인들이 쉽게 감지하기 어려운 뜻밖의 증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소장질환 진단에는 복부촬영이나 영상 의학 진단기법 등이 동원된다. 우선 사례와 같이 위장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소장의 위치가 내시경이 삽입되는 입이나 항문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장 진단에는 CT 촬영이 선행된다. 그러나 CT로 해결이 안 될 경우 캡슐내시경이나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캡슐을 삼켜 장 운동에 따라 이동하는 내시경이 소장 상태를 촬영하도록 하는 캡슐내시경 기법은 수면,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통증도 없다. 또한, 검사자가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복통이나 복부팽만감 등의 불편함도 뒤따르지 않아 매우 유용하다. 소장 검사에 특화된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특수풍선이 장착된 내시경을 소장에 삽입해 전체 소장을 관찰하는 검사 기법이다.

기고

남도의 성숙미를 기대하며



이건철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사업이 평가위원 선정을 계기로 본격화될 기세다. 기대와 함께 우려감이 앞선다. 얼마 전 예술고와 전남도립미술관 입지 선정 후 발생했던 불협화음이나 이번 공무원교육원 부지 선정과 관련해 벌써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사업은 믿어도 될 것 같다. 부디 결과에 승복해 남도의 성숙미를 보여줌으로써 앞서 발생한 불협화음이나 갈등을 치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믿어도 된다고 감히 확신하는 것은, 전

남도청, 세계박람회, 세종시, 혁신도시 등 주요 입지선정에 참여했던 입지선정 경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 이상으로 완벽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할 때 문이다.

첫째, ‘공모방식’을 취하지 않고, 후보지 추천방식을 도입했다. 공모방식을 취할 경우,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들이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 ‘아전인수’(俄田引水) 식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가 혼란을 초래한 기존 입지선정 사례에서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둘째, 평가기준과 세부지표와 함께 가중치가 이미 지난 9월 시·군선평의회에서 공개되었다. 균형발전기여도(25점)를 필두로 접근성·개발용이도·이전비용(각 20점), 교육환경(15점)과 14개 항목에 이르는 세부지표를 공개했다. 적절한 평가기준으로 사료되며, 이를 일찍 공개한 것은 보기 드문 공정한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셋째,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 이상의 공

정성을 담보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경·향의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평가단 풀을 마련한 후, 이 가운데 해당 시군 관계자가 탁구공 추천방식으로 지역 출신과 수도권 출신 각 5명씩을 선정하게 된다. 전국 어느 입지선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공정한 선정방식이다.

넷째, 이전비용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시·군의 부지제공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군의 건의를 반영한 결과이긴 하지만, 시·군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만큼 세심한 분야까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사업은 첫째도, 둘째도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어 결과가 기대되고 주목된다.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남공무원교육원이 연간 15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만3000여명의 교육생이 다녀가면서 파생되는 가시적 경제효과만도 최대 2억원에 이르고, 공무원교육원이 입지하는 상정성과 함께 홍보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사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승복하는 성숙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불복할 경우 모두에게 피해만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연구원 생활 동안 참여한 입지선정에서 잊지 못하는 사업은 세종시, 세계박람회, 혁신도시다. 세종시는 공주·연기군 등 4개 지역이, 세계박람회는 여수·목포가, 혁신도시는 나주와 담양이 경쟁했으나, 모두 실패한 지역이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혁신도시 입지 선정 때는 감동스러운 장면도 연출되었다. 혁신도시의 중요성과 기대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입지 선정 직후 담당군이 바로 승복하고, 군수가 직접 나주시에 축하 화환과 떡시루를 전달한 사실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선행이었다고 확신한다.

이번 전남공무원교육원 입지선정도 혁신도시 입지선정 이상의 완벽한 성숙미가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無等鼓

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됐다.

그가 책에서 거론한 사례에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난 2013년 미연방 항공국은 “적절한 때 조종사들이 수동 조작으로 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권고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자동 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급 상황에서 비행기를 원상회복하는 순발력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물론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사선과 전문의들은 1990년대부터 유방을 촬영하면서 환

부를 찾아내기 위해 컴퓨터 지원 시스템을 사용했으나, 점차 초기 단계 종양 등 비정상 징후들을 발견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가 의사들의 판단 능력을 소트트했다고 분석했다.

첨단기술이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사례는 손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반드시 인간의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 penfoot@

편리함의 그늘

내비게이션을 차에 장착한 후 개그 프로그램이나 나을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신안의 어느 섬 내비게이션 영상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내가 운전하는 차가 길이 끊긴 바다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으나... 내비게이션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은 탓이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디지털 사상이인 니콜라스 카의 ‘우리 감옥’이란 책을 깊게 읽게 됐다. 그는 “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무능해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한다. 결론은 “기술이 제공한 편리한 삶은 우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